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2월 8일 밤늦게 국회는 이번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의 결론을 무시하고 의원 정수를 획정위 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나 민간시민단체의 선거 참여에 필수적인 제 58,59조의 개정을 거부하고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을 그대로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에 적용하기로 하여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거의 전면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4개월로 단축하는 후안무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총선시민연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민들의 유권자운동과 후보 등의 선거운동은 구별되어야 하며 유권자운동에 관하여는 그 기간, 방법상의 제한이 없거나 최소한에 그쳐야함을 밝혔고,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은 국민들의 지지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입법권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참정권의 당연한 구결임에도 이번 선거법은 여전히 주권자의 주권자에 대한 의사표현을 기간과 방법 두 측면에서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총 선 시민 연대는 이번 낙천, 낙선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밝힌 바대로 우리 운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개정선거법에 불구하고 국민들을 향한 지금까지의 활동을 계속할 것을 밝힌다. 우리 활동이 실정 법상 불법이라 판단된다면 이는 위임된 입법권을 남용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우리 총 선 시민 연대는 앞으로 농성과 개정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서명 운동, 집회 등을 계속할 것이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여야 3정당에 대한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된 선거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0. 2 .11

2000 총 선 안 양 시 민 연 대

안양YMCA/안양YWCA/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안양시민대학/KYC안양군포의왕지부/안양내일여성센터/
안양여성의 전화/안양여성회/안양지역시민연대/경기중부노총문화정보센터

-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와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와 서명운동, 시민홍보활동을 함께할 시민실천단을 모집합니다.
-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 209-01-0889-662 총선연대
농 협 : 136-12-570032 안명균(안양총선연대)
- 16대 총선출마 예정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사무국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87-28 2층 환경운동연합 431-081 T : 458-9070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홈페이지 www.ngokorea.org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총선을 낯은 정치 심판장으로! 국민주권의 축제로!

민주화가 되면 정치는 자연히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와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이권담합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낯은 정치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가 IMF를 불렀습니다. 낯은 정치가 유권자들을 해묵은 지역감정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참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우리의 심부름꾼들에게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낯은 정치 퇴장! 부패정치, 지역정치는 20세기와 함께 무대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새 천년 무대의 주인은 4천만 국민입니다.

■ 유권자 행동 지침 ■

1. 부패무능불성실 정치인 113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전화와 편지를 각 당 공천심사위에 보냅니다.
2.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거법 58조, 87조, 254조는 세계유래가 없는 악법입니다. 개정된 선거법도 87조만을 개정한 알팍한 눈속임입니다. 낙선운동 합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서명에 동참합니다.
3. 음모론으로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를 바보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4. 지역감정은 망국병입니다. 지역감정을 유포하는 정치인을 추방합니다.
5. 지역구의 공천예정자 중 부패행위자가 있으면 그 구체적 근거와 함께 총선연대에 제보해주시시오.
6. 후보자 부패전력, 납세사항,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7. 금품수수, 향응제공 정치인을 고발합니다. 돈 안 쓰는 선거가 깨끗한 정치의 시작, 아직도 돈주고 표를 살수 있다고 믿는 낯은 정치인들을 심판합니다.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심판으로
유권자 혁명을
이루어냅시다."**